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대전환 시대 노동운동 진단 연구 발표 토론회

일 시 | 2024년 8월 29일(목) 13:00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대 전환 시대 노동운동 진단 연구 발표 토론회

일시 | 2024. 8. 29(목) 13:0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좌장. 이문호(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

발제1. 대 전환 시대 외부환경의 변화

- 김장호(민플러스교육원 원장)

발제2. 대 전환 시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3. 민주노총 조직상태 진단

- 김성혁(민주노동연구원 원장)

토론1. 정성희(소통과학연구소 소장)

토론2. 장귀연(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장)

토론3. 이정희(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목 차



■ 발제1. 대전환 시대 외부환경의 변화	
김장호 (민플러스교육원 원장)	 1
■ 발제2.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4
■ 발제3. 민주노총 조직상태 진단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25
■ 토론1.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35
■ 토론2. 장귀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장)	 43
■ 토론3.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46

대전환 시대 외부환경의 변화

김 장 호

(민플러스교육원)



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측면들을 살펴보고, 노동 운동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겠습니다.

목차

- 1 — 세계질서의 변화
- 2 — 기술·기후·인구구조 변화
- 3 — 소결 : 노동운동에 대한 시사점



세계질서의 변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다극화 질서로의 전환

- 2차 대전 이후 케인즈주의적 조절경제 → 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 위기 → 신자유주의 본격화
- 90년대 소련동구사회주의의 몰락 → 지구적 범위에서 세계화
- 2001년 중국 WTO 가입 : 내용적 완성

세계 공급망의 재편과 세계화의 균열

- 신자유주의 국제분업체제와 중국의 성장
- 미중 갈등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의 균열
 -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
 - 정부주도 경제전략의 강화
 - 뉴 워싱턴 컨센서스와 동맹공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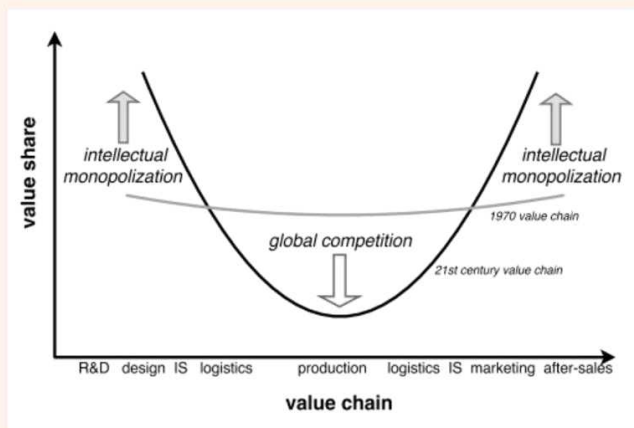
탈달러와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 달러패권의 성립과 금융 세계화
- 달러체제와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 금융공황과 장기 저성장
 - 자산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 인플레이션의 발생
 - 부채위기

전환기 양상과 시사점

- 미국 일극패권의 쇠퇴
- 브릭스 플러스 등 대항세력의 성장
- 동맹의 재구성과 전쟁위기의 확대
- 시사점 : 지정학적 관점, 체제전환적 관점

글로벌 가치사슬의 스마일 곡선



- 서열화된 국제분업체제
- 다단계 수탈체제

- 미국이 만든 국제분업체제
- 미국이 재편하고 있는 국제분업체제

공급망 균열의 특징

■ — 보호무역주의 또 다시 대두

- 1,2,3차 세계화 물결과 자유무역주의~보호무역주의
- 미중 관세전쟁
- WTO무역분쟁 증가, 중국 관세법 직접보복 양상
-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거대 FTA 협정 주춤

■ — 정부주도 경제산업전략

-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4조 3700억 달러
- 유럽연합 산업정책 : 그린딜, 유럽산업전략, 중소기업전략 등
- ✓ 단순히 큰 정부로의 회귀가 아니다.

■ — 뉴워싱턴 컨센서스와 동맹 공핍화

- 뉴워싱턴 컨센서스 : 2023.4.27. 브루킹스 연구소. 제이크 셸리번 연설
- 대중 디커플링 ~디리스팅
- 오프쇼어링 → 온쇼어링,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 프렌드 쇼어링의 두 가지 기능 : 동맹 공핍화
- 한국 프렌드 쇼어링의 문제점 : 국내산업 공동화

공급망 균열의 특징

■ — 보호무역주의 또 다시 대두

- 1,2,3차 세계화 물결과 자유무역주의~보호무역주의
- 미중 관세전쟁
- WTO무역분쟁 증가, 중국 관세법 직접보복 양상
- 자유무역협정(FTA), 지역무역협정(RTA), 거대 FTA 협정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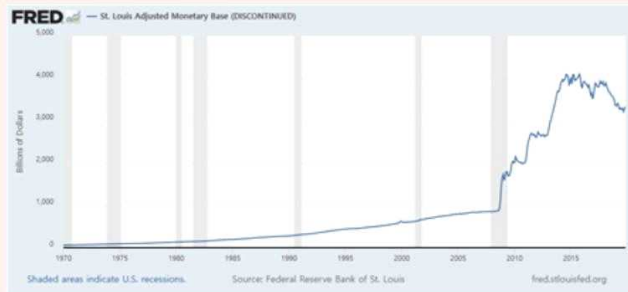
■ — 정부주도 경제산업전략

-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4조 3700억 달러
- 유럽연합 산업정책 : 그린딜, 유럽산업전략, 중소기업전략 등
- ✓ 단순히 큰 정부로의 회귀가 아니다.

■ — 뉴워싱턴 컨센서스와 동맹 공핍화

- 뉴워싱턴 컨센서스 : 2023.4.27. 브루킹스 연구소. 제이크 셸리번 연설
- 대중 디커플링 ~디리스팅
- 오프쇼어링 → 온쇼어링,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 쇼어링
- 프렌드 쇼어링의 두 가지 기능 : 동맹 공핍화
- 한국 프렌드 쇼어링의 문제점 : 국내산업 공동화

달러팽창과 금융자산의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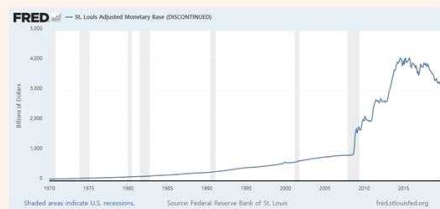


	1980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총생산	11	22	29	32	45	63	75	85
금융 자산	12	56	75	119	165	219	345	469

- 1965년 380억 달러
- 1975년 776억 달러
- 1985년 1,820억 달러
- 1995년 4,015억 달러
- 2005년 7,766억 달러
- 2010년 1조 9,700억 달러
- 2015년 3조 6,100억 달러
- 2020년 세계 달러유통량 5조 3,484억 달러

달러체제와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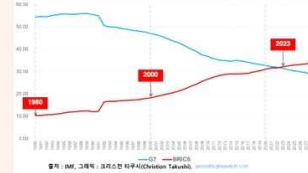
- 금융공황과 장기저성장
- 자산불평등과 빈부격차 확대
- 인플레이션 발생
- 부채위기



전환기 양상과 시사점

■ 미국 일극패권의 쇠퇴

- 신자유주의 세계화 = 미국 일극패권에 기반
- 세계화 = 미국화 → 탈세계화 = 미국 일극패권의 쇠퇴
- 미국 군사, 정치, 경제적 패권의 쇠퇴



■ 브릭스 플러스 등 대항세력의 등장

■ 동맹의 재구성과 전쟁위기의 확대

- 바이든 정권 = 미국 개입주의적 자유주의자(민주당)과 일방주의적 공화당 네오콘의 연합권력
- 트럼프 세력 = 일부 지배층과 백인중간층 대변
- 동맹정책, 전쟁정책으로 표현
- 러·우전쟁, 중동전쟁, 아시아판 나토와 4개의 열점으로 확대. 한반도 위기

■ 대전환기의 시사점

- 지정학적 관점
- 체제전환적 관점

기술의 변화

산업혁명의 역사와 핵심추동력

농업혁명			자연력 이용
기계 혁명	제1의 기계시대	1차산업혁명	기계화
		2차산업혁명	기계화 + 전기화
	제2의 기계시대	3차산업혁명	기계화 + 전기화 + 컴퓨터화
		4차산업혁명	기계화 + 전기화 + 컴퓨터화 + 지능화

디지털 전환과 미래 노동시장 전망

- 기계와의 전쟁(Brynjolfsson and McAfee)
- 고용없는 미래(Ford)
- 일의 미래보고서(ILO)
 - 디지털 경제는 지역, 성별 격차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
 - 클라우드 워킹 = 디지털 일용직 노동자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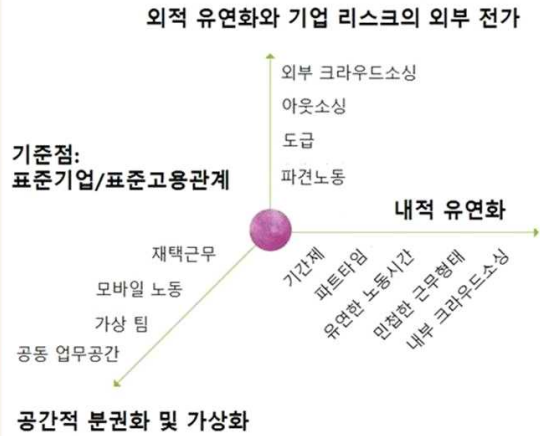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WEF)

-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 2023
- 향후 5년 동안
- 6,900만 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8,300만 개의 일자리 대체
- 약 1,400만 개(2%) 일자리 감소

직업별 일자리의 변화 예상

	빠르게 증가	빠르게 감소
1	AI와 기계학습 전문가	은행원과 관련 사무원
2	지속가능성 전문가(ESG 경영 등)	우편서비스 사무원
3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I) : 데이터 가시화 시스템	계산원과 매표원
4	정보보안 전문가	데이터 입력원
5	핀테크 엔지니어	행정 비서
6	데이터 분석가	자료 기록 및 재고관리직
7	로봇 엔지니어	회계, 부기, 급여 사무원
8	전기기술 엔지니어	입법자 및 공무원
9	농업 장비 운영자	통계, 금융, 보험직
10	디지털 전환 전문가	방문판매원, 노점상, 소매판매원

고용체제의 변화



인간중심 3대의제 10대 권고

인간능력에 대한 투자 확대

1.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 권리 인정, 생애과정 동안 효과적인 평생학습체계 구축
2.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경로 구축, 고령근로자 경제활동 지속 선택지 확대, 근로자 노동시장 이행 과정 대비 선제적 지원
3. 남성과 여성의 돌봄 동등 책임, 여성 집단적 이해대변 강화와 성찰별 해소, 직장내 폭력 금지 등 성평등을 위한 변혁적 측정가능한 의제 이행
4. 지속가능한 자원과 연대의 원칙, 위험분담원칙 기반, 자영업자 포함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출생에서 노년까지 보편적 사회보호체계 강화

노동제도에 대한 투자 확대

5. 노동기본권, '적절한 생활임금', 근로시간 제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보장 포함 노동보호 최저선(a labour protection floor)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노동권(Universal Labour Guarantee)
6. 최저근로시간 보장, 유연근무제 확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시간 선택지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조정제도, 시간 주권(Time Sovereignty) 확대
7. 공공정책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이해대변, 사회적 대화 강화
8. 양질의 일자리 지원 기술 활용, 기술에 대한 '인간 주도적' 접근방식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

9.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핵심분야에 대한 투자 촉진 인센티브 도입
10. 실물경제 장기투자 장려, 기업 인센티브 구조 개편, 웰빙,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평등을 향한 성과 측정 보충지표 개발

외국사례와 시사점

유럽노총

- 기술에 대한 맹종, 무시 양방향 경계
- 기회와 위험 동시 접근
- 기술결정론 극복, 노동중심 디지털 전환을 위한 노력
- 권고사항
 - 아웃소싱 관련 단협, 표준노동조건
 - 도입초기부터 감시
 - 도입과정 노동자 참여
 - 정의로운 디지털화 협약신기술 도입
 - 일시적 보류권리 도입
 - 특고, 자영업자 조직
- 결의안
 - 2016, 2020, 2023~2927행동프로그램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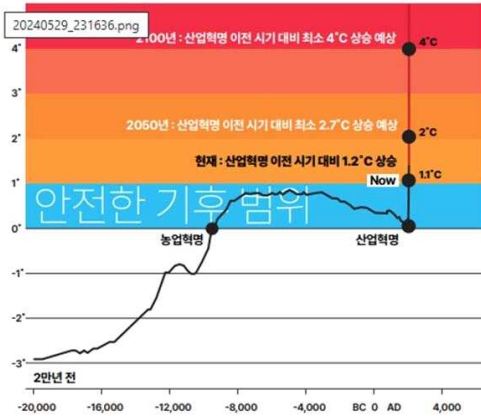
- 독일노총
 - 디지털 조사
 - 영향분석
 - 디지털 전환 현장 채택의 경로
- 독일금속노조
 - 디지털화를 통해 노동의 인간화와 생산성 향상 동시 추구' 전략
 - BMW : 고속련-고부가가치-고 임금 전략 / 노동시간단축, 주4 일제
-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 각종 선언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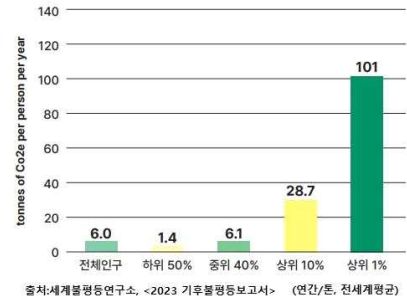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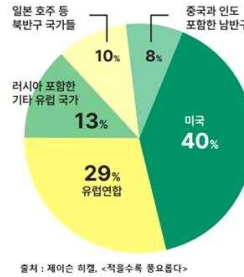
- 사회적 담론 형성이 시급
- 전통적 노동기본권 적극 강화하면서 새로운 노동기본권의 결합
-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가이드 라인제시와 교섭 안내
- 전략조직화 사업 강화
- 효과적인 사회적 연대투쟁과 정치적 쟁점화 강화

기후 위기

기후 위기 심각성



기후 위기 책임성



기후대응역사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저감(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 1988.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 1992.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1997. 교토의정서. 37개국 5.2%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
- 2015. 파리협약. 197개국. 최대 섭씨 2°C ~ 최소 1.5°C 이내

실패의 요인

- 2023.3. IPCC 6차보고서. 이미 1.1°C도달. 2040년 이내 1.5°C
- 녹색제국주의: 탈탄소만 있고, 탈자본, 탈성장 없음
- 기술주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환경오염 발생
- 녹색보호주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시장주의: 탄소배출 거래제(ETS)
- 녹색성장주의: 그린워싱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전제
- 각국 산업정책이 녹색산업전환에 영향을 주고, 디지털 전환과 맞물리며 국제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
- 중국: 공세적 녹색발전, 에너지 전환정책: 태양광, 전기차 등
- 미국 IRA법, 유럽: Fit for 55, 리파워 유럽 계획, 그린딜 산업계획
- 공통점: 녹색성장주의에 입각

대한민국: 기후약당국가 + 약탈전환국가

- 재생에너지 비중 약 6%,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증가 1위, 석탄발전 3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력대비 부족
- 전략산업구조 재편사: 급진적 민영화 → 우회적 민영화
- 문제점
 - 2022~23년 한전 적자 37조원, 가스공사 미수금 15조원
 - SK, GS, 포스코 3대 민자발전사 영업이익 매년 2조원
 -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이윤추구형 태양광 설치 사업, 농어촌 무자비한 파괴

각 부문별 발전시장 점유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p)
한국수력원자력	설비용량	26.9	23.8	22.9	22.8	22.1	-4.8
	발전량	31.2	27.7	24.3	26.7	29.8	-1.4
	거래금액	27.0	20.7	17.5	18.1	23.0	-4.0
5개 화력발전	설비용량	47.0	46.3	45.3	43.8	42.7	-5.2
	발전량	50.3	49.3	49.0	45.9	41.6	-8.7
	거래금액	51.7	52.8	51.4	49.8	47.2	-4.5
기타(민간)	설비용량	25.2	29.9	31.8	33.4	35.2	10.0
	발전량	18.5	23.0	26.7	27.4	28.6	10.1
	거래금액	21.3	26.5	31.1	32.1	29.8	8.5

기후위기가 노동에 주는 영향

불평등 심화

- 캘리포니아 산불 : 부유층 빈곤층에 대한 차별적 영향
- 한국 21년 여름 폭염 차별적 영향
- 말라리아, 코로나19 펜데믹 등 전염병 차별적 영향
- 주거, 교육 불평등

일자리 악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2만 2천명 인력 축소. 비정규직 피해
- 자동차산업, 서비스업 마진까지

노동, 생명안전위협

- 폭염 노동, 열사병
- 재난 업무 트라우마

외국사례와 시사점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 미국의 석유·화학·원자력노조(OCAW) 지도자 토니 마조치 : 환경파업(1973)
-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1990년대) → 정의로운 전환(1995)
- 2000년대 국제노총(ITUC) : 국제적 확산
- 2009년. 유엔기후협약당사국 총회 '정의로운 전환' 소개
- 2015년 파리협약. 서문에 명시
- 정의로운 전환 담론 주류화
- 정의로운 전환담론의 왜곡된 재건을 위한 노력

정의로운 전환운동 사례

- 1982. 미 노스캐롤라이나 워렌 카운티 흑인커뮤니티, PCB(폴리염화비닐 투기 저항시위)
- 1989. 말레 선언
- 1993.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
- 2010. 우루과이. '2005-2030 에너지 전략계획'
- 2023년 5월, 뉴욕주. '공공재생에너지건설법'(Build Public Renewables Act, BPRA)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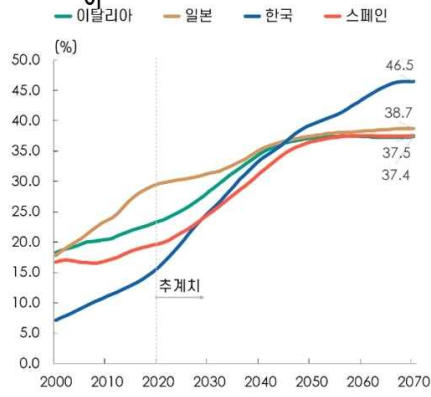
- 분산형 에너지 믹스를 넘어 '중앙집중형 공기업 주체'를 튼튼히
- 정부의 마중물론 경계 : '외형제거 국가론'의 변형
- 일자리 창출 전략과 연계
 - 재생에너지 일자리
 - 공공교통 일자리
 - 건물 리모델링 일자리.
 - 생태적 농림축산어업 일자리
 - 보건의료· 양육·요양 등 돌봄 노동 일자리 등

약탈적 전환	정의로운 전환
민영화, 시장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	공공적 에너지 전환
노동자 배제한 탈석탄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
기업의 RE100 캠페인과 ESG	오염 기업에 대한 공적 감시와 책임 부과
대기업과 중산층 중심 전기차 지원 비정규직 확대 및 노동조건 악화	공공교통 강화와 자가용 소유 억제 비정규직 철폐, 노동권 강화
기본권과 주거권 배제한 기후 적응 정책	주거권, 이동권, 사회권 강화, 기후 적응 정책
출처 : 민영화된 재생에너지의 문제점과 공공재생에너지의 필요성(구준모)	

인구구조변화

속도 문제

주요국 고령화 추이



합계 출산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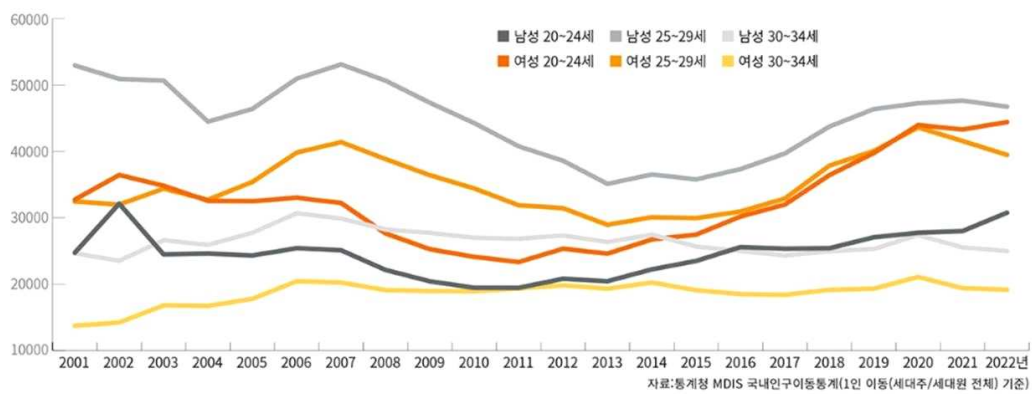


인구 상황판



격차 문제

성별·연령대별 서울로 이주하는 1인 이동 변화(단위: 명)



경제·노동에 미치는 영향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약화
생산가능인구 = 2019~2050 = 1/3로 축소
잠재성장기여도 = 2022년. 이미 -0.1%
- 노년부양비 급증
노인부양인구 : 2020년 100명당 21명 → 2070년 1인당 1명
- 노동시장 양극화 : 고학력자, 저학력자
- 사회적 쟁점 빈발

역대 정부의 대책

- 2006.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15년 동안 380조원 예산 투입
- 2024. 6.19. 윤석열 정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인구전략기 획부' 신설, 사회부총리 장관 수행
- 실패의 요인 : '적응'을 무시하고, '완화'에 치중
- 구조정책 소홀

사회적 파급효과

- 가족의 변화와 가족을 통한 격차의 확대
- 지방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 지방대학 소멸의 위기 심각
- 사회적 갈등 심화

주요 계급, 계층 문제

- 청년 문제
- 노인 문제
- 여성 문제
- 이주노동자 문제

외국사례와 시사점

일본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RENGO)
- 정년 후 재고용 정책
- 노동시간 단축운동
 - 렌고 1천800시간 모델
 - 일하는 방식 개혁법

스웨덴

- 성 평등 노동정책 강화
 - 스웨덴 노동조합연맹(LO)
 - 남녀간 노동시간, 임금, 권 력의 균등에 노력

독일

- 노동시간단축
- 자율적 유연근무제
 - 28시간 근무와 전일제(35시간) 근무 사이에서 선택 + 4.3% 임 금인상
- 외국인 노동자 노동허가제
 - 40만
 - 차별금지

시사점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보편적인 대응
- 디지털, 녹색전환 대책이자 저출생·고령화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이기도 함
- 자율적 유연근무제. 시간주권 강화
- 정년연장, 이주노동자 조직적 토론을 통한 대책
- ✓ 저출생·고령화문제는 한국사회모순의 집결점이라는 시각이 중요
 - 주거, 교육, 건강, 노후, 지방소멸 등 민중의 기본권 문제
 - 노동, 청년, 노인, 여성, 이주노동자 각계 민중의 문제

대전환의 내용	주요 시사점	
	주요 의제	운동 방향
신자유주의 세계화 → 다극화	· 국제공급망의 재편 / 탈달러와 금융자본주의 약화 · 신흥대안세력의 등장 / 동맹재편과 전쟁위기 - 반제반전평화 → 지정학적 관점 + 체제전환적 관점	주권 기반 다극화
디지털 전환	· 일자리와 노동기본권의 위기 / 인간, 노동중심 디지털 전환 · 재벌과 중소기업 격차 해소 → 민간영역 주도 보편적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	기 본 권 민주주의 · 공공성 · 차별과 격차 해소
녹색 전환	· 기후악당국가 - 약탈전환 정책 극복 / 체제전환적 정의로운 녹색 전환 담론 · 에너지 전환을 핵심으로 도로교통, 돌봄, 의료, 교육 분야 병행 → 공공부문 주도 정의로운 전환과 민주적 통제 확대를 위한 운동	
인구구조 변동	·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속도 /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 · 노동, 청년, 노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 각계각층 문제 심화 · 일자리, 주거, 교육 등 기본권 문제 심화 · 한국 종속적 신자유주의 체제 모순의 집결점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이구변화 대응 운동	

감사합니다

대전환 시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

남 우 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

2024. 8. 29.

남 우 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 들어가며

◆ 87년 이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노동의 대응 모색

- 한국 노동시장도 노동자 대투쟁(1987년), 외환위기(1997년), 세계 금융위기(2008년) 등을 변곡점으로 해서 내부노동시장의 형성, 분절노동시장의 고착화가 진행됨.
- 이런 결과로 노동시장의 기업 규모별 격차, 고용형태별 격차, 성별 격차 등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 양극화 양상을 띠면서 대두되었고, 노동조합운동도 이에 착목해서 운동전략을 수립해왔으나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실리주의에 기반한 기업별 노사관계를 주축으로 하고 있으며, 근래에 노조운동 차원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기업별 교섭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 향후 노동운동의 과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분석 차원에서 노동시장 분절로 인한 불평등 심화 현상을 살펴보고, 노사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함.

2. 노동시장 분절 양상 및 대응 과제

◆ 노동시장 변화의 시기 구분

- 한국의 노동시장도 단일노동시장에서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함. 이후 1997년 외환위기는 노동시장 분절을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됨.
-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플랫폼경제의 성장과 함께 비임금노동자층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용의 초유연화 시기로 접어들게 됨.

시기	노동시장 특성	노동시장 상황
1987년 이전	단일노동시장	고용, 규모 간 낮은 임금격차, 높은 이동성
1987년 ~ 1997년	내부노동시장 형성	임금, 근속 격차 확대, 낮은 이동성
1997년 ~ 2010년대 후반	이중구조 고착화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유연화
2010년대 후반 이후	고용의 초유연화	비임금노동자 증가

2

2. 노동시장 분절 양상 및 대응 과제

◆ 노동시장 분절과 불평등 양상

- 비정규직 비율이 2002년 56.2%, 2023년에는 41.0%임. 비정규직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23년에는 899만 명. 비정규직 비율은 줄어 들고 있지만 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비율을 보면 2001년 53.5%, 2023년에는 53.7%. 상대임금 비율이 46%~53% 사이를 기록하는 사이 임금액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음.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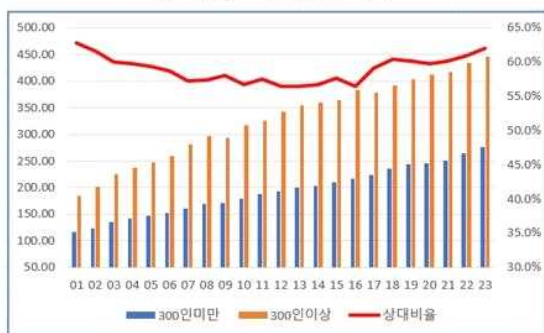
3

2. 노동시장 분절 양상 및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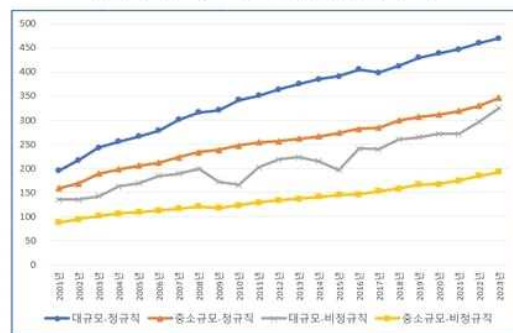
◆ 노동시장 분절과 불평등 양상

- 사업체 규모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의 상대임금 비율을 보면 2001년 62.8%, 2023년에 61.9%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대규모 사업체(300인 이상) 정규직은 2001년 195만 원에서 2023년 470만 원으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체(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2001년 88만 원에서 2023년 192만 원으로 가장 완만한 상승세를 보임. 이러한 임금격차는 향후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사업체 규모별 임금 격차>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별 임금 추이>



4

2. 노동시장 분절 양상 및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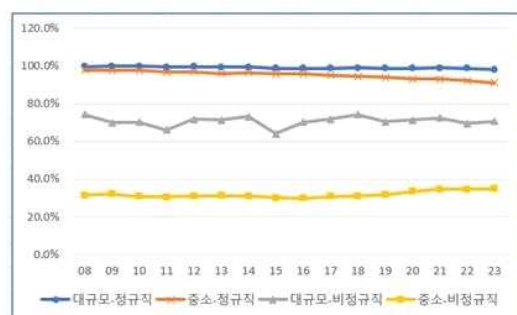
◆ 노동시장 분절과 불평등 양상

-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로 했을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1년에 39.7%였고, 2010년에 34.6%로 가장 낮았다가 점차 상승했지만 2023년에 39.3%에 머물러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은 대규모사업체(300인 이상) 정규직은 98%~99.9% 수준임. 반면, 대규모사업체 비정규직은 64%~74% 수준이고, 중소기업체 비정규직은 30%~35% 수준으로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사업체 규모, 고용형태별 국민연금 가입율>



5

2. 노동시장 분절 양상 및 대응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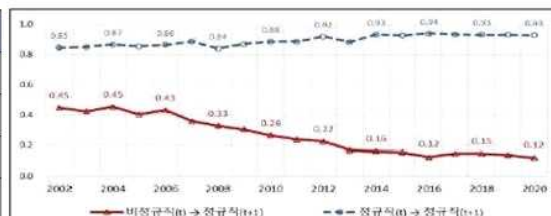
◆ 노동시장 분절의 고착화

-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경우 60.2%였으나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동하는 경우는 11.8%에 불과함.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비정규직이었다가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45% 수준을 유지했으나 그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2년에는 12%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정규직 고용형태에서 계속 정규직 고용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200년 85%에서 2020년 93%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 일자리 이동>

구분	변동인원 수(천명)	변동인원 비율(%)
대기업 → 대기업	194	39.8
중소기업 → 중소기업	2,348	88.2
대기업 → 중소기업	293	60.2
중소기업 → 대기업	315	11.8

<고용형태별 노동 이동>



6

2. 노동시장 분절 양상 및 대응 과제

◆ 노동시장 분절 요인

- 기업규모, 고용형태, 성별 노동시장 균열이 존재하는 '중층적 분절노동시장'을 특징으로 함.
- 고용형태, 기업규모, 성별 이외에도 학력,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의해서도 노동시장 분절현상이 나타남.

◆ 노동시장 분절화 해소를 위한 과제

첫째, 고용 불안정성을 축소하고 보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개선이 필요함.

둘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와 적용 확대,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함.

셋째, 노조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협약적용률 제고와 산별교섭 활성화가 필요함.

7

3. 주변부 노동시장 과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 공무직 법제화, 통일적인 임금 체계 수립, 정수 관리 및 유지, 공무직 인사관리 담당 별도 기구

◆ 간접고용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
- 파견과 도급의 기준 법제화
- 기업변동 시 고용 등 노동권이 보장
- 분사, 인수합병 등 기업집단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 특수고용

- 실질적인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수립
- 종속적 자영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

8

3. 주변부 노동시장 과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공무직)

- 공무직 법제화, 통일적인 임금 체계 수립, 정수 관리 및 유지, 공무직 인사관리 담당 별도 기구

◆ 간접고용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
- 파견과 도급의 기준 법제화
- 기업변동 시 고용 등 노동권이 보장
- 분사, 인수합병 등 기업집단의 경영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

◆ 특수고용

- 실질적인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수립
- 종속적 자영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

8

3. 주변부 노동시장 과제

◆ 플랫폼노동

- 노동자성 오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지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수립
- 알고리즘(자동화된 의사결정) 통제에 대한 노동자 권리를 확립
- 플랫폼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

◆ 돌봄노동

-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
-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
- 숙련을 고려한 표준임금체계가 마련

9

3. 주변부 노동시장 과제

◆ 고령노동

- 고령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고용보험법이 개정
-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적극적 논의 필요

◆ 이주노동

- '사용하고 버리는 식'의 정부 정책 기조 변화
-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
- 이주노동자 지원 기능을 활성화

10

4.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 87년 이후 조직률 변화

- 1989년 이후 조합원 수의 감소와 정제 요인에 대해서는 구조적 요인과 정치사회적 요인 등이 작용.
- 산업구조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의 서비스화와 관련된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여성노동의 증가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노조 조직률 감소를 초래.
- 정치사회적 차원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기업의 구조조정과 아웃소싱 등으로 사업체 규모의 비중 구성에서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

<노동조합 조직률 변화>



11

4.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 정부 노동정책 변화와 노사관계

- 1987년 이전은 군사독재 정권의 권위적 노동억압정책과 이로 인한 노사관계의 관제화 시기
-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정부의 권위주의적 노동억압정책과 개발독재라는 축적체제를 거부하는 투쟁
- 1990년대 초반 노동조합의 공세에 대해, 정부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운동세력 고립화에 집중
- 97년 이후의 정부 정책은 노동유연화 기제를 토대로 노사관계를 규율하고자 함

구분	87년 체제		97년 체제	
	'87~'92 노동 공세기	'93~'97 노사관계 제도화	'98~'02 노동 수세기	'03~'07 노사관계 이원화
정치환경	노태우정부 권위주의체제	김영삼정부 문민정부	김대중정부 여야 정권교체	노무현정부 참여정부
노동정책	- 전노협 고립화 - 물리적 개입 - 임금억제	- 노개위 - 노동시장 유연화 - 협력적 노사관계 제도화	- 노사정위원회 - 노동시장 유연화 - 민영화, 구조조정	- 노사정위원회 - 비정규입법 - 노사관계로드맵
노동운동	- 노조 대중화 - 노동쟁의 폭증 - 변혁적 노동운동	- 대기업노사관계 제도화 - 정치적 노동운동의 쇠퇴 - 민주노조운동 합법화	- 구조조정 반대투쟁 - 산별노조 건설운동 - 양노총 경쟁과 협력	- 대기업노조 고립화 - 비정규직 투쟁 - 산별교섭 확대

12

4.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노동의 대응

-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별 노사관계의 구조화 및 산업별 노사관계 형성의 미진함, 정부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노동운동의 체제내화 시도 등을 특징으로 함.
- 정부의 공세에 대한 대응으로 2000대 들어서는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의 투쟁이 분출되어 나오면서 노동 정국의 새로운 변수를 형성.
- 한국통신계약직노조 투쟁(2000년), 캐리어사내하청투쟁(2001년), 완성차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2003년)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었고, 화물연대 파업(2003년)을 시작점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투쟁이 이어졌으며, 근로복지공단 이용석 열사 투쟁(2003년)을 시작점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이 이어짐.
- 비정규직 투쟁은 대우차(2001년), 쌍용차(2009년) 등 정리해고 반대투쟁, 발전노조 파업(2002년), 철도노조 파업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 반대 투쟁과 함께 정부 노동정책에 대응하는 주요 노동사건을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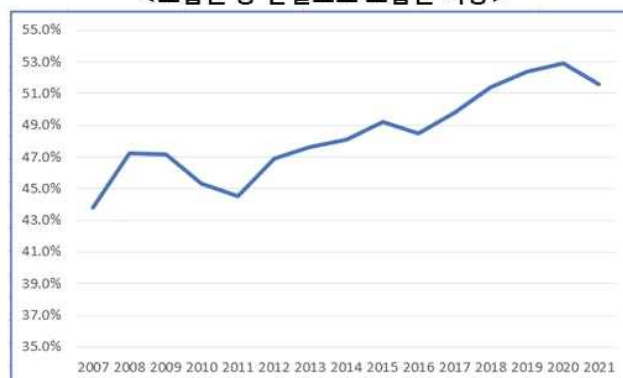
13

4.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 노사관계의 변화 : 산별노조운동

- 한국의 노동조합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산별노조 전환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노조 형식적으로는 전체 조합원 중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이 절반 이상.
- 통계청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전체 조합원 293만 명 중 산별노조 소속 조합원은 151만 명으로 51.6%를 차지. 산별노조 조합원 비중이 민주노총 87.6%, 한국노총 31.0%

<조합원 중 산별노조 조합원 비중>



14

4.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 노사관계의 변화 : 초기업교섭

- 산별노조 조합원 비중이 높다고 해도 실제로 산별교섭을 통해 산업 차원의 임금교섭을 집중화해내고 산업 차원의 노동조건 기준을 수립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임.
- 1980년 이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강제된 기업별노조 전통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노조 형식은 산별노조지만 노조 내적 통합성이 낮고 산별교섭을 제대로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교섭수준'(bargaining level)의 측면에서, '초기업단위 교섭'은 산업별 교섭, 업종별 교섭, 직종별 교섭, 특성별 교섭, 동일 원청 소속 다수 하청업체 교섭, 동일 원청 소속 다수 계열사 교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초기업교섭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량적으로 파악된 자료는 없으나, 최근 다양한 유형의 초기업교섭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투쟁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15

4.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변화

◆ 노사관계의 변화 : 이해대변 방식의 다양화

- 노조가 아닌 새로운 주체가 비노조방식으로 이해대변을 시도하는 방식임. 기존의 전통적인 조직방식에서 벗어난 준노조들(quasi-unions)은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

◆ 지역노동센터

- 전국 70~80여개 지자체 위탁 센터가 10여 년 동안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활동을 하고 있음.
- 지역노동센터는 서비스모델로서 이해대변활동과 조직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직접 조직화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노동센터와 조직노동 간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 노동공제운동

- 노동공제연합 풀빵(30여개 조직이 가입), 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이 활동 중.
- 노동공제회가 노동조합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임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님. 기업 내 복지가 취약하고, 사업장 노사관계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이 어려운 제도 밖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노동공제회가 역할 중.
- 조직화 차원에서 노동공제운동에 대한 조직노동의 지원과 건인이 필요함.

16

5. 소결

구분	영역별 의제	대응 방향
노동시장 변화 과제	<보편적 노동권> - 근기법 확대 적용 : 5인 미만, 초단시간 - 노동자성 오분류 시정 : 비임금노동자 / - 차별금지 : 이주노동	- 당사자 조직화 (전략조직화) - 노동정치력 제고 - 시민사회 연대 전략 - 대안제시 정책능력 제고
	<고용안정성 제고> - 고용원칙 수립 : 상시지속업무 상용직 직접고용 - 기간제 사유제한방식 적용 / - 갱신기대권, 고용승계기대권 입법화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 - 최저임금 현실화 및 확대적용, 최저임금 제도개선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제도 개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성별임금공시제 세분화 및 미이행 사업주 제재 강화	
	<공공성 강화> - 돌봄노동기본법 : 돌봄 및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책임제	
노사관계 변화 과제	<노동3권 확대> - 노조법 2, 3조 개정 : 간접고용, 특수고용	- 산별노조운동 강화 - 노동연대 확장
	<교섭집중화, 노조효과> - 초기업교섭 활성화 제도 개선 / - 협약적용률 제고	
	<이해대변 방식 다양화> - 지역노동센터, 노동공제운동 등 연대 강화 / - 조직화와 연계	

17

민주노총 조직상태 진단

김 성 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민주노총 조직진단과 시사점

김성혁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1. 민주노총 조직상태 진단
2. 사회변화와 노동시장 변화 대응
3. 민주노총의 과제

1

1. 조직 확대

- 양적 확대 : 1995년 418,154명 → 2023년 1,073,634명으로 증가
- 질적 변화 : 정규직, 대공장, 남성 → 여성, 비정규직 확대

여성 비중

2008년 23.9 → 23년 38.2%

비정규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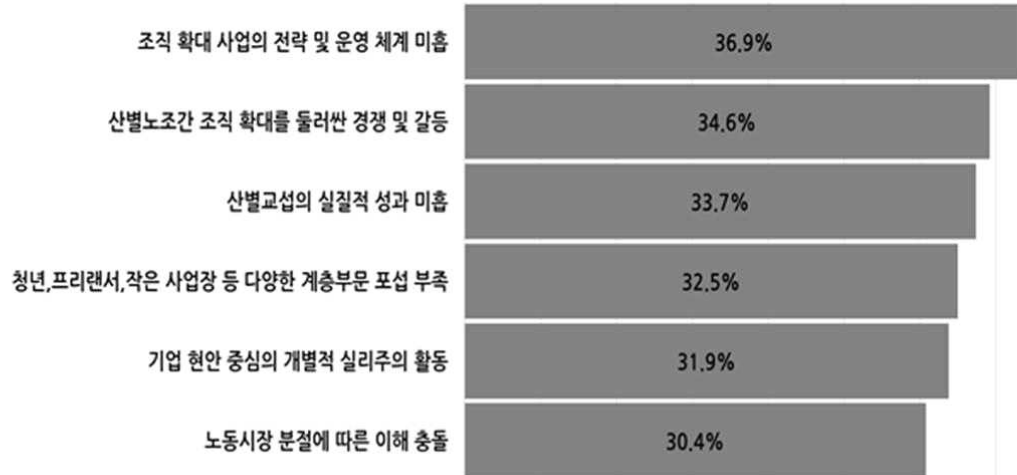
2013년 20.2 → 23년 31.8%

민주노총 조합원 수 추이



1. 조직 확대

- 조직확대가 어려운 내부적 요인



2. 조직 운영

- 민주노총 지침 전달과 의사결정
공문, 텔방 등으로 전달은 잘 되지만, 조합원까지 소통, 실천 연결은 저조
- 의사결정구조
대의원대회 2000여명으로, 대회 장소와 시간 제한
- 민주노총 각급단위 관계
총연맹, 산별, 지역본부, 지역산별 단위사업장 협력보다 갈등적
- 재정
사업비 비중 1996년 28% → 2024년 10.9%로 감소
고정비인 운영비(인건비 포함) 비중 2005년 25% → 2023년 55%
차등납부 이후 1,350원 구간 15만명, 670원 구간 14.2만명으로 증가 추세
정책제로 물가상승 반영되지 않아 몇 년에 한번씩 계속 의무금 인상하고 있음

3. 산별 운동 (성과 미흡)

대분류	소분류
조직 형태만 형식적인 산별에 불과	실질적으로 산업을 대표하지 못하고 관념적 구호만 존재
	단위노조의 가맹 체계나 협의체에 가까움
	한국의 산업구조와 노동운동 실정에 맞는 지 의구심
산별 내 분절과 산별 간 경쟁 구도	산별 내부의 기업규모, 고용형태, 업종, 직종, 조직력에 따른 격차와 분절
	여전한 기업별노조 방식에 기초하여 상호 이해관계 봉합에 급급
	몸집만 불린 대규모 산별이 원칙 없는 조직 확대에만 치중
	산별 조직 간 구획과 경계 모호, 갈등 심화
실질적인 성과 미흡, 기획·운영 체계 부족	산별교섭 실질 성과가 미비하여 기업별노조 형태를 강화하는 악순환
	성과가 없으므로 효능이 낮고, 발전적인 투쟁이 더욱 어려움
	성공적인 산별노조 운동과 교섭을 위한 체계, 대안, 정책의 부족
취약한 법 제도와 사회적 영향력	사용자단체가 강제되지 않고 매우 소극적임
	제한적인 협약 효력과 적용 범위로 인한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축소
민주노조 정신 후퇴 및 투쟁력 약화	기업 또는 산별의 실리적 성과 추구로 계급 전체의 단결은 뒷전
	현재 한계를 극복할 사회변혁 의식, 사회연대, 투쟁력의 부족

3. 산별운동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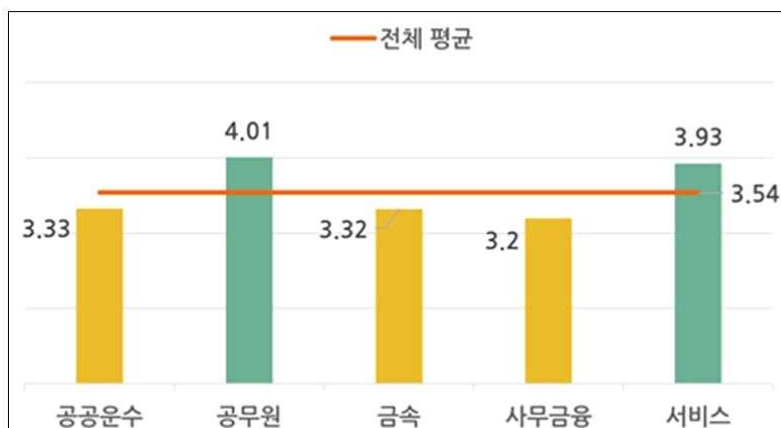
- 산별연맹의 조직 확대 경쟁이 심각 3.31(평균 이상 : 공공, 공무원, 민주일반, 서비스)
- 총연맹이 조직화를 조정, 조율해야 3.65
- 유관 산업별로 가맹조직 통폐합 3.54 (보건의료 3.26, 서비스 3.79)
면접에서 당위적으로는 동의하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로드맵과 중장기 전망 필요
- 기업 현안 위주로 산별노조 운동 정체 3.64

4. 노동자 정치세력화

- 조합원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지 못한 배경 : 정치인에 위임, 위탁정치
- 의회 중심주의로 대중투쟁과 대중 정치활동 약화, 의회 권력을 둘러싼 과도한 경쟁
- 진보정당의 분열, 분화
- 민주노총이 노동자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주도 3.61
- 2026년 지방선거까지 진보정치 연합정당 추진 3.54
- 진보정당의 분열, 다원화를 존중 2.93
- 지지정당 : 진보4당 42%, 민주당계 30.3%, 없음 22.5%, 국힘계 2.8%, 기타 2.5%
- 민주노총 중앙이나 산별 중앙보다는 현장간부일수록 민주당 지지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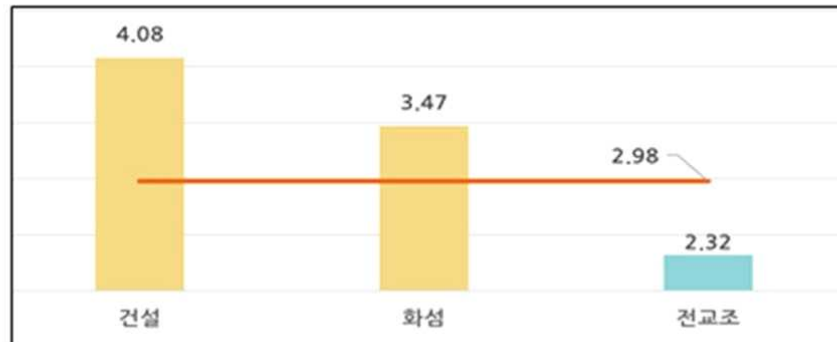
4. 노동자 정치세력화

- 지방선거까지 진보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연합정당 건설해야 : 가맹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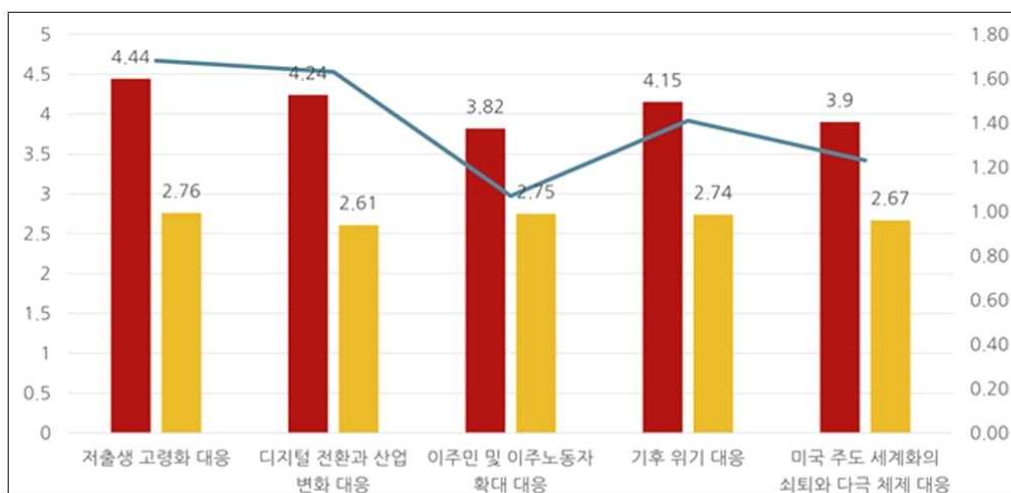
5. 사회/노동시장 변화 대응

- 저출생 현상의 주요 원인은 소득, 자산 불평등에 있다 4.20
- 선진국과 부자들의 탄소 배출량에 비해 책임의 분배는 불공정하다 4.32
- 기업 주도 디지털 전환은 노동강도 높이고 불평등 심화시킬 것 3.89
- 중국, 러시아, 브릭스 등의 부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약화되고 있다 3.77
- 이주노동자가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아래 그림) 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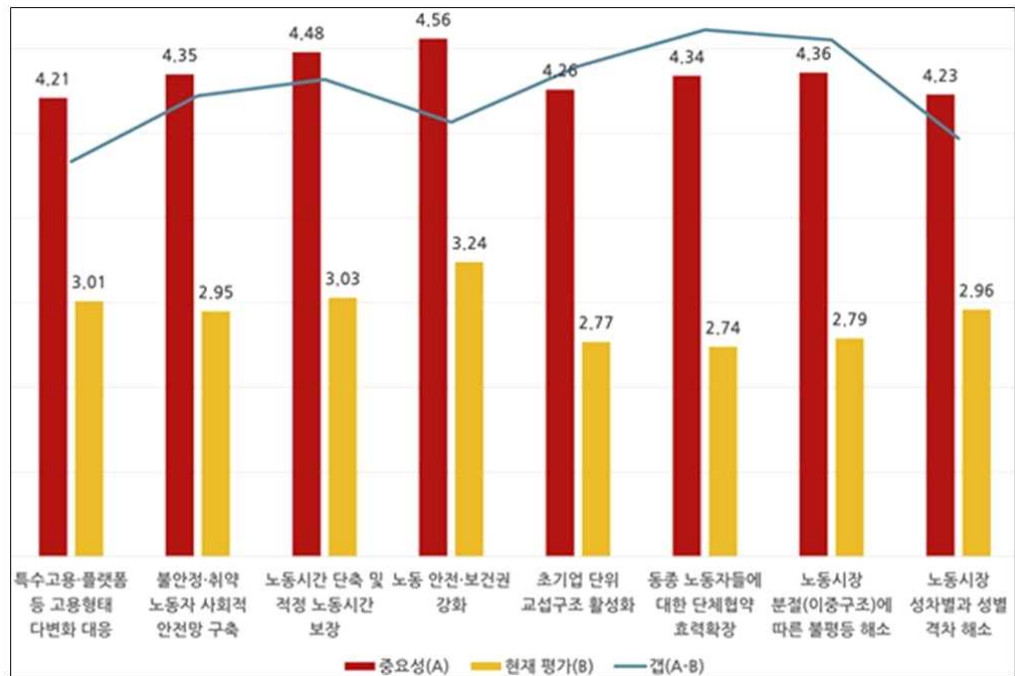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

- 민주노총 대응의 중요성과 현재 평가 사이의 갭



노동시장 변화
민주노총 대응
의 중요성과
현재대응 평가
사이의 갭



종합진단

-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 느린 이유

질문	응답 빈도		총점
	1순위	2순위	
소속 노조들의 기업 현안 중심의 경제적 실리주의	324	145	631
민주노총·산별 조직 지도부(상층)와 현장의 괴리	161	185	427
노조 간부들의 사회변혁, 사회개혁 의식과 실천의 부족	141	187	399
노조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의 제약	181	109	381
노조 간부 고령화 및 세대교체 지체	76	176	290
산별교섭, 산별노조 운동의 성과 미흡	92	104	242
산별·연맹 간 조직 확대를 둘러싼 갈등	78	99	216
노조 운동 이념과 명분의 과잉	78	78	195
노조 내 교육 사업의 부족	59	86	175
부족한 정책 연구 역량	46	67	136

12

종합진단

- 혁신이 시급한 과제

혁신과제 (n=1,236)	응답 빈도			총점
	1순위	2순위	3순위	
노동자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 및 현장 정치 운동 활성화	296	193	98	980
산별교섭 체계 구축 및 산별노조 운동 강화	330	133	99	959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선전홍보 및 조합 간부 교육	140	180	178	728
다양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 결성·가입 추진	104	153	158	596
정책역량 강화 및 중장기 연구사업 활성화	96	156	146	572
집회, 캠페인, 조합원 모임 등 노조 문화 혁신	71	121	177	501
의결 구조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개선	80	106	168	487
진보 시민사회 운동 진영과의 적극적 연대	61	122	127	432
당면 요구 관철을 위한 투쟁 활성화	58	72	85	309

5. 민주노총 향후 과제

1) 운동방향 정립 : 체제전환 운동(사회대전환)

- 미국주도 질서 약화, 다극화 세계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의 낡은 사회체제는 불평등과 빈곤, 주기적인 경제위기, 예측과 전쟁위기, 기후재난과 저출생 문제 심화
- 종속적 세계화 체제의 온존 또는 자본기술시장 주도 전환은 한국 노동자 민중 희생
- 노동운동은 자본과 정권의 전략에 갇히거나 사후 저항이 아니라, 스스로 대안을 세워 한국 사회 바꾸는 전략 필요
- 현단계 체제전환이란 대미 종속 동맹을 탈피하고 신자유주의 불평등을 타파한 노동자 민중이 주도하는 자주평화체제, 평등복지사회를 의미
- 체제전환운동은 노동기본권 강화,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 재분배로 불평등 해소, 정치경제군사적 주권 확립을 주요 내용

민주노총 향후 과제

1) 운동방향 정립 : 체제전환 운동의 의의

- 체제전환 운동은 대전환 시대 노동운동이 경제주의, 실리주의를 넘어 사회개조운동으로 발전하는 동력
- 부문, 산업, 기업 단위 각개 약진이 아닌 새로운 사회, 노동자 민중의 집권을 지향
- 시민운동, 민중운동,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과제 도출, 광장투쟁 전개
- 불평등, 재난,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 낡은 질서 바꾸는 개헌운동과 결합 가능, 민주노총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높임.

민주노총 체제전환 운동 주요내용 예시	구분	주요 내용
	노동	- 노동기본권 확대 및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노동법 전면 개정 - 일자리 국가책임 - 초기업교섭, 단협효력확장 등 노사관계 개혁으로 노동소득분배율 상향, 임금격차 완화
	정치	- 교사, 공무원, 농협 등 협동조합 노동자 정치기본권 보장 - 선거제도개혁 : 위성정당금지·비례확대, 이중당적제, 결선투표제 - 직접민주주의 강화 : 국민참정권, 국민소환권
	경제	- 신자유주의 성장모델 폐기, 진보적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 재벌체제 청산 : 총수경영 타파, 국내투자 확대, 원하청 관계 민주화 - 금융 공공성 강화,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개편, - 불로소득 환수와 부의 세습 방지를 위한 세제 등 제도개혁 - 부자증세, 누진증세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의 책임성 제고
	공공성과 인권·복지	- 민영화 중단, 에너지산업 재공영화, 정의로운 산업전환 - 전 국민 고용보험, 공적연금 강화로 복지수준 향상, 사각지대 타파 - 교육, 의료, 주택, 돌봄, 교통 등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및 무상화 대폭 확대 - 지역 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 - 직종, 남녀, 국적, 학력, 나이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자주·평화 체제	-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주권 확립, 대미 종속 탈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16

민주노총 향후과제 2) 조직혁신

의제	내용
조합원 소통 방식	산별과 지역본부를 통한 조합원 실태파악 및 소통. 민주노총은 500명 조합원 패넬을 구축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여론조사(1~2년에 1회)
의결기구	대의원 1천명 수준으로 운영(조합원 1000명 당 1명) 안정적인 토론 공간과 시간 보장, 안건에 대한 숙의과정 보완
의무금	산별연맹과 민주노총 모두 정률제로 전환(2~3년 준비기간)하여 물가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운영 보장
사회적지지	노동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와 투쟁방식 개발, 시민들의 이해를 포함한 주거·교육·의료·돌봄·교통 등 공공성 확대 사업 역량 강화
산별교섭	공동투쟁이 가능한 업종·특성별 교섭을 추진하고, 다양한 초기업교섭을 활성화시켜 산별 중앙교섭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음.
산별 조직갈등	총연맹 중심으로 관련 노조들의 공동실천, 공동교섭 추진, 조직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강화.
정치세력화	노동자가 정치운동의 주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간 관계/역할 정립,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도 합의

토론1. <제2장 대전환시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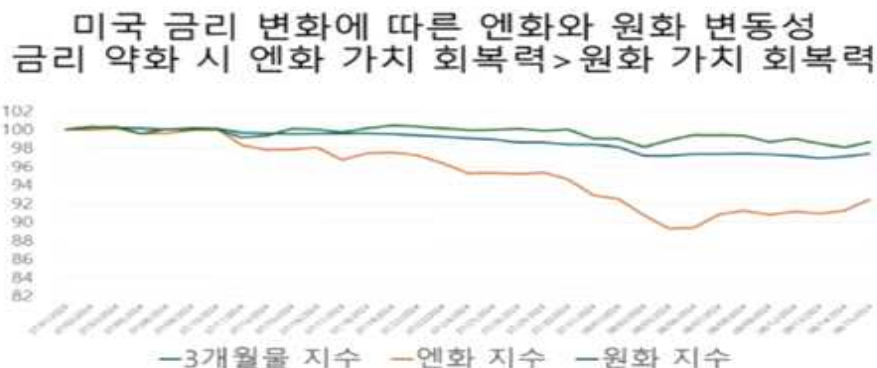
1. 세계 다극화 추세의 한국경제 출로

1) 대외 의존 수출주도 외자·재벌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는 미국-중국의 전략경쟁, 우크라이나전쟁-중동 전쟁, 미국의 금리, 통화, 환율, 주식, 무역 정책에 크게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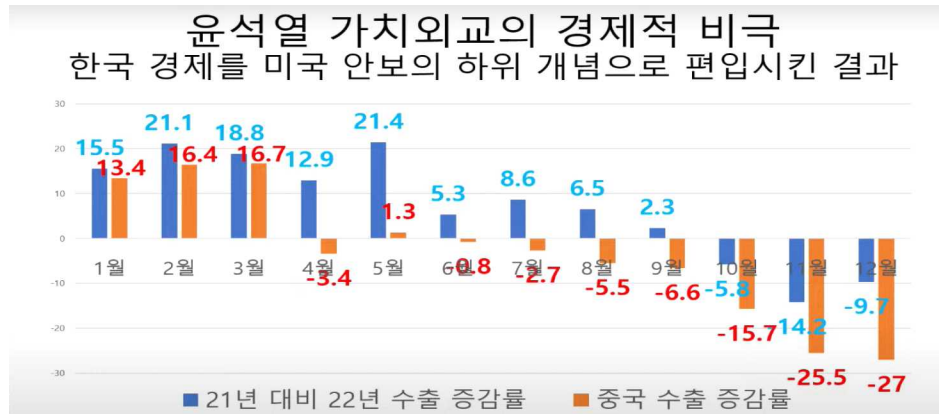
- 한국경제의 기술·에너지·시장·자본 의존도

기술	기술무역수지 2억 8천만 달러의 적자 기록	첨단기술 일부를 미국, 일본, 유럽 등에 여전히 수입.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에서 기술무역수지의 적자 폭을 줄이는데 기여
에너지	에너지 수입 의존도 약 93%, 전력 생산의 약 62% 화석연료 의존	석탄, 천연가스, 석유 등의 화석연료 수입, 사우디(원유), 카타르(LNG), 미국(원유, LNG), 러시아(천연가스) 등
시장	한국 GDP 대비 수출 비중 약 40%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석유화학 제품 등 크게 차지. 독일 약 47%, 중국 약 20%, 미국 약 10%, 일본 약 15%, 프랑스 약 31%, 영국 약 30% 등
자본	주요 은행 및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율 (2024년 8월 현재)	동양생명 82.28, S-Oil 76.43, KB금융 76.18, 삼성전자우 76, 하나금융지주 69.33, 현대차우 66.51, 현대차2우B 62.97, 신한지주 60.67, 삼성전자 56.24, LG화학우 55.69, SK하이닉스 54.79, 삼성화재 53.97, LG우 47.24, KT 47.17 등

- 한국의 대미 금융종속 : 미 금리 동조화, 미 양적 완화->한국 자산 가격 상승 및 금융시장 유동성에 큰 영향. 미 금리 인상->달러 강세 초래->원화 가치 하락->수입 원자재가격 폭등 초래, 미 S&P 500, 다우존스 지수 상승 또는 하락->한국 코스피 지수도 동조화 경향



2) 윤석열 정권의 친미 친일 일변도 가치 외교로 민생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 반도체 자동차 등 중국 수출 격감, 삼성전자의 베트남 시장 2위 전략, 현대차 등 러시아 한국 법인 철수 등
- 한국 재벌의 막대한 대미투자로 한국 산업 공동화 및 고급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고도 중국 소재 사용 배터리 제품, 북미지역 이외 생산 한국 전기차 보조금 배제

그룹	투자금액	사업 내용	비고
현대차	55억 달러	전기차 전용공장 설립	22. 5. 21 발표
	50억 달러	도심항공교통(UAM), 로봇틱스(로봇+과학),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22. 5. 22 발표
삼성	170억 달러	신규 파운드리 공장 건설 중	2021년 11월 발표
	1,921억 달러	20년 동안 반도체 공장 11곳 신설	2022년 7월 계획 제출
	25억 달러	합작 배터리 공장 설립 (삼성SDI)	2022. 5. 24 발표
SK	70억 달러	배터리 공장 설립	2022. 7. 13. 발표
	220억 달러	반도체, 배터리, 그린에너지, 바이오	22. 7. 27 발표
	520억 달러	2030년까지 투자 계획(위 290억달러 포함)	2021. 10 발표
LG	110억 달러	배터리 공장, 양극재 공장 설립 및 예정	2022. 7 현재
	44억 달러	혼다와 배터리 합작공장 설립(51:49)	2022. 8. 29. 발표

-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투자에 대한 미국의 간섭으로 더욱 수출시장이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고급 기술 유출 방지, 중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동맹국인 한국과의 협력으로 중국의 기술 경쟁력 견제, 한국 정부와 기업들에 직접 정책 압력(한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이나 자재를 사용할 때 특정 조건 부과, 중국과의 협력에 제약)

반도체 장비 10월7일부터 발효

특정 기술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 및 중국 소재 공장에 수출하는 경우 별도 허가 필요

- * D램: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 * 낸드 플래시: 128단 이상
- * 로직칩: 핀펫(FinFET) 기술 등 사용(16nm 내지 14nm)



- ✓ 중국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공장에 수출, **사실상 금지**(‘거부 추정 원칙’ 적용)
- ✓ 외국기업이 소유한 중국 내 공장에 수출, **개별 심사 필요**

삼성전자·SK하이닉스, 1년 유예

- 삼성전자 중국 내 공장: 낸드플래시 생산공장, 반도체 후공정 공장
- SK하이닉스 중국 내 공장: D램 공장, 반도체 후공정 공장, 낸드플래시 공장

반도체 10월21일부터 발효

특정 사양의 첨단 컴퓨팅 칩, 특정 사양의 서버컴퓨터용 제품, 미국 ‘우려 거래자’에 등재된 중국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시

- ✓ 위 3가지 품목 **사실상 수출 금지**(‘거부 추정 원칙’ 적용)
- ✓ 제3국 생산 제품도 미국 기술 등 사용시 **수출 금지**(‘해외직접생산규칙’ 적용)

중국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등 중국기업 31개를 ‘미검증명단’으로 추가해 잠정적인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

자료: 미국 상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은 기자 20221012

3)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통해 제국주의 독점자본+재벌->중소영세자본->노동자, 서민의 다단계 위기 극복, 부담 전가로 한국사회 불평등 심화

끔찍한 토지소유 불평등



대한민국 소득 분포의 실태

하위 41%선 (약 1040만 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연소득보다 낮은 2,180만원



가계 부채 → 내수 → 성장률 → 가계소득

가계부채 10%p ↑ → 가계소비 2.4%p ↓ (94%)
가계소비 비중 10%p ↓ → 성장률 3.9%p ↓ (88%)
가계부채 10%p ↑ → 가계소득 비중 2.3%p ↓ (88%)

가계 실질소득 연평균 증가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연도별)



4) 세계 각국의 실리 균형 외교 사례

- 현재 BRICS 가입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입 신청국 및 관심 국가인 아르헨티나,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터키, 우르과이, 이외 다양한 국가들이 관심 표명, 회원국 확장 논의 계속(2023년 기준, 전 세계 GDP의 G7 약 40%, 브릭스 약 25% 차지)

- 일본, 러산 LNG 6780억엔 수입, 70달러 미만으로 러산 원유도 들여와/한국 난방비 폭

등의 원인 : 대러제재 동참으로 난방 주연료인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과 비교/EU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증가, 특히 벨기에 스페인, 러산 천연가스 수입 두 배 증가/사우디의 OPEC+ 감산 결정 주도, 국제유가 상승, 대이란 관계 개선, 중국 주도 상하이협력기구(SCO) 부분 가입/중국, 인도 등 전 세계 석유 주요 수입국, 러시아 등에서 석유 대량 수입/러시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브라질, 가봉 등 세계 각국의 중국 방문 및 정상 회담/이란·시리아 동반 사우디행...카타르·바레인도 관계정상화...예멘 휴전 논의/리비아 동부 관할 정부(GNS) "러시아와 외교관계 강화할 터"/아프리카 차드, 미 석유기업 엑손 모빌 자산 국유화/멕시코 군, 카리브해 미국기업 채석장 시설 압수

- 세계 각국 탈달러 현황

러시아, 해외결제에 위안화 사용...러시아-중동·이란·인도, 스왑·현지 통화 사용/러시아-중국, 현지 통화 거래...위안화,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거래/러시아-인도, 석유제품 거래에서 루블로 전환...인도, 18개 국가와 루피 거래/러시아-이란, 현지 통화 거래, 러시아 MIR 결제시스템 연결 결정/러시아, 아프리카와 현지 통화 거래 발표...위안화 사용 가능/사우디(GCC)-중국, 페트로 달러 폐기, 위안화 거래...중, 사우디에 위안화 차관 공여/브라질-중국, 양자 무역에서 위안-헤알 사용, 중국 CIPS 결제 시스템 이용/프랑스-중국, 액화천연가스(LNG) 위안화 거래...UAE, 탈달러화 허용/동남아국가연합(ASEAN), 달러·유로·엔·파운드 의존도 축소와 현지 통화 거래 논의/인도네시아, 남미와 현지 통화 거래...미 비자 및 마스터카드 사용 중단 지시/칠레, 아르헨티나 등 25개국 이상 중국과 위안화로 결제/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자체 기축통화 가능성 모색/CELAC(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공동체), 자체 통화 논의 시작/BRICS와 남미 무역블록 메르코수르, 공통 통화 설정 논의/쿠바, 러시아 미르 결제시스템 수용 시작/스리랑카, 자국 통화로 러시아 비료 수입 계획/파키스탄, 러시아 원유 첫 주문/케냐-사우디, 케냐 통화로 석유 구매/중국 일대일로, 147개 회원국과 4조 달러 이상 인프라 프로젝트

5) 자주외교로 민생평화를!

	친미친일굴종외교	자주균형실리외교
군사	대북압박 대중견제 대러봉쇄 한미일 군사 동맹 예측, 한미일 확장억제협의회 구축으로 전쟁위기 가중,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대만문제 언급,중러 표적으로 안보위기 가중	미중 미러 균형외교, 남북 평화협력 군사연습 중단, 종전-평화협정 체결 미중 대결 완충, 우크라-중동 전쟁 종식, 동북아 집단안보체제로 평화 실현

경제	반도체-과학법,인플레 방지법 등으로 동맹 수탈, 사상 최대 무역적자,달러 추종-외환 위기 조짐, 미국 주도 공급망 위한 재벌의 대미 퍼주기 확대, 미래 산업-기술 약화, 제조업 공동화 가속화	미국의 동맹수탈 악법 독소조항 개정, 국제 결제수단 다양화, 다자 무역 확대, 국내 제조업 강화, 해외투자 다각화, 남북경협 복원에 기초한 북방경제 개척
민생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실질임금-실질소득 감소,내수 침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파산 증가 구조조정,실업자-비정규직 증가,일자리 축소	미국 고금리 동조화 차단, 물가 인하 최저임금 인상, 실질임금-실질소득 향상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 중소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정치	윤석열정권 굴욕외교, 반미반일감정 고조, 경제-평화 위기 심화, 정쟁 격화, 국민통합 저해, 노동개악으로 부담 전가, 노동-공안 탄압 가속화	민생 민주 평화 망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진보대연합-민주개혁진보연대 정부 수립 자주외교 민생안정 경제발전 평화번영

2. 지능정보산업시대에 맞는 공동체사회의 제도와 사상 확립 필요

-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2차 산업혁명은 전기기술에 기반한 (반)자동화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등 IT기술에 기반한 디지털 정보화(지식정보화사회), 4차 산업혁명은 AI 등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지능화(지능정보화 사회), 과거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해 준 것과 달리, 이제는 AI 등이 인간의 정신노동까지 대신하려 하고 있음.
- 지능정보산업시대, 지능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이 과학연구사업과 정보 수집, 새 기술 개발로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생산공정의 선행단계에서 많이 고용, 계약제 파견제 시간제 등 임시 고용형태 많이 늘어나고 실적급, 성과급, 포괄임금제 등 도입.
- 자본가들이 정보설비를 이용, 지능노동을 가혹하게 착취, 최대한의 독점적 고윤이윤 확보함. 지능노동 자체가 질이 높고 노동일 연장, 노동강도 더 높여 착취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
- 기계제산업시대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로 이윤율은 저하되는 경향성 있었으나 육체노동과 보통의 노동수단에 비해 몇 배, 몇십 배의 생산성을 가진 지능노동과 정보설비가 이용되므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져도 이윤율은 오히려 높아짐.
- 지능정보산업시대 자본주의 착취는 더욱더 교활하게 은폐, 많은 산 노동의 참가 없이 정보설비를 이용, 물질적 부를 생산, 이윤을 증식시키기에 마치 높은 이윤이 지능정보기술수단의 산물처럼 보이기 때문. 로봇 등 무인화현상
- 지능노동의 생산성이 가변적임. 같은 질의 지능노동이라도 이용하는 정보설비의 성능

에 따라, 같은 정보설비라도 이용하는 사람의 지적능력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

- 지능정보산업시대에는 직접적인 생산공정의 선행단계에서 지능노동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착취대상으로 보이지 않음. 마치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와 계약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단순한 거래자처럼 나타남.

* 강남 ICT 프로그램 개발 청년 노동자의 현실

- 회사 안팎의 장시간 노동에도 시간 외 수당 줄여 포괄임금제 실시
- 가령 10시간 노동의 미실적 보다 30분 노동의 실적을 우대하는 기업 문화
- 회사 차원의 돈 들어가는 AI 등 기술교육 미흡, 개인 경쟁, 다수 도태 분위기

- 지능정보화시대, 능력에 따라 일하지 못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받지도 못하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고 일한 만큼 받는 사회주의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 공산주의로 발전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자본주의 체제, 특히 대외 의존 수출 주도 외자-재벌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사회의 지능정보산업화는 대량 실업-반 실업 양산, 불평등 심화, 사회갈등을 조장할 뿐임. 관련 노사 간의 단체협약 체결이나 노사민정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법 제도 정책 개선으로도 명백한 한계를 드러낼 것임.

-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지능노동은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에 지능노동자의 분배 몫이 육체노동자의 그것보다 크다. 일한 것, 번 것에 관계 없이 다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분배의 평균주의는 노동 열의를 떨어뜨리고 놓고먹는 풍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비판되고 있음. 노동에 대한 물질적 평가에 정치적 평가를 결합함. 그런 의미에서 생산력 발전 수준, 공동체사회의 제도와 사상 확립을 전제하지 않는 기본소득제 주장은 문제임.

3. 기후 위기 극복, 녹색 전환 관련

1) 환경보호 대책

- 환경 파괴는 현대산업 발전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대책 세우지 않는 자본주의 나라들의 반민중적 시책의 결과, 이윤 추구 목적의 경제 건설, 독점자본가들은 공해산업 건설도 참여, 공해 방지, 환경보호에 유리한 경제 건설, 공해산업 건설 금지, 환경산업 장려, 민중의 생명과 건강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에서는 공해산업 자제

- 환경산업=환경보호에 적합한 산업 : 환경제품 생산 산업부문, 환경보호 관련 서비스 부문 등, 환경제품=환경보호에 이용되거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제품 : 환경 보호 이용 시약, 재료, 설비나 시설, 유기식품 등, 환경보호 서비스 : 환경 보호 위한 기술서비스, 자문 서비스, 오염시설 운영관리 서비스, 폐기 자원 회수처리 서비스 등
- 녹색에너지 소비형 경제로 전환 : 녹색에너지->환경오염 물질을 적게 방출, 환경보호에 유리한 에너지, 태양 풍력 생물에너지, 화석에너지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새로운 기술공정 개발 이용, 녹색에너지에 기초한 새로운 에너지 생산공급체계 창설
- 공해물질 방출되어도 정화 능력과 균형이 맞을 때 환경 파괴되지 않으며 공해 현상 일으키지 않아 : 여과장치, 제진장치, 방음장치, 오수 정화 등 환경보호 시설 투자, 자본주의 나라들은 이윤을 저하 때문에 환경보호 시설에 자본투자 하지 않으려고 함.
- 공업지구 건설 분산배치 원칙 철저 견지 : 자연계에 존재하는 정화 능력 타산, 여러 지역에 산업시설 분산배치, 지역들 사이의 경제발전 균형 보장, 도시공해 방지 효과, 유해 물질 많은 공업시설 경우, 공업지구와 주민지구 먼 거리 분리

2) 에너지 부문별 고용효과

- 발전 부문 : 신규 발전소의 고용 창출 효과는 발전 기술에 따라 다름. 가장 노동집약적인 발전 기술은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화력발전(연료에 의존), 발전 부문 고용의 경우, 건설·설비제조 비중이 높고 유지·보수 비중이 낮음.
- 주택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 노동집약도가 높음(소형 부품, 옥상 설치 작업 특성, 다수 패널 사용 등의 특성), 시공 및 유지·보수의 고용비중이 큼. 지역정책, 공급사슬 등으로 지역 간에 차이
- 옥상 풍력, 수력, 대규모 태양광 : 노동집약도가 원자력, 주택용 태양광, 화력 발전 등보다 낮음.
- 가스 화력 발전 : 노동집약도가 타 화력 발전보다 낮음(건설 기간 감소화, 운전 효율 향상 등의 영향).
- 수력발전 : 건설(발전소) 비중이 크고 시장·입지의 영향을 받음.

* 에너지 효율 부문 고용효과

건물 부문

(기존 건물) 재건축은 에너지효율부문의 고용창출 요인

(신축 건물) 소수의 고임금·고급기술 노동력 수요 증가 요인(설계, 난방, 공조 등)

자동차산업

(내연기관차) 연비규제가 고용 창출 요인(부품 생산·제작 분야의 추가 고용 발생)

(전기자동차) 전기구동계(배터리 등) 부품의 생산·설치로 인한 추가 고용 발생

내연기관은 복잡한 공급사슬과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생산·설치 고용을 창출하므로 양자 간의 고용 격차를 상쇄

저탄소에너지시스템

에너지효율, 저탄소 에너지 공급 인프라 제조·건설 등과 관련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탈화석화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므로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 고용감소 야기

4. 결론

- 미국 일극 패권으로부터의 세계 다극화 추세, AI 등의 지능정보산업시대, 기후위기 극복 녹색 전환, 저출산-인구절벽 해소는 모두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자주적 민주주의변혁을 거쳐 자주적 사회주의로의 체제 전환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자본의 위기 극복에 양보, 후퇴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 경험만이 아니라 조선, 쿠바,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나라의 노동, 생산, 분배, 공급, 관리, 재정, 금융 등에 대한 연구 토론도 한국 사회 대전환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토론2. <3장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한 토론문

장귀연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권연구소장)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현재 특성을 정리해 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이미 연구 최종본인 것 같아서 말을 보태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좀더 부연·강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1. 노동시장 분절 양상 및 요인

노동시장 특성의 변화 과정을 1987~1997년 내부노동시장 형성, 1997~2010년대 후반 이중구조 고착화, 2010년대 후반 이후 고용의 초유연화라고 정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중구조가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의 분절노동시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987~1997년의 내부노동시장 형성이 바로 이중구조의 형성이기도 합니다. 즉 1997~1997의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미 이중구조가 형성됩니다. 1997년 이후의 이중구조 고착화는 기업들의 유연화 전략과 비정규직 확산으로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전 시기 형성되었던 이중구조의 고착화라기 보다는 ‘내부노동시장의 잠식(또는 축소)’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특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분절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 이전 시기의 일이라면, 이 시기에는 이른바 경영합리화-구조개편 등의 명목으로 (대)기업들이 외부화와 비정규직 사용을 추구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내부노동시장 부분을 외부로 밀어내는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재의 상황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말로는 제대로 설명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중구조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양상을 ‘고용의 초유연화’라고 표현하신 듯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비임금노동자의 확산이 가장 중요하게 지저할 만한 지점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중구조라고만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복잡한 양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내에서도 분할이 일어납니다. 무기계약직/계약직/일용직/특수고용, 1차사내하청/2차사내하청 등등. 또 대기업의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정규직을 비교해 보았을 때 중소기업 정규직이 더

노동조건이 좋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공장에서도 1차 사내하청은 외부의 협력업체보다 더 노동조건이 좋은데, 전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고 후자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시장 분절과 불평등 양상’을 비정규직 추이, 임금격차(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사회보험, 이동성 각각 따로 보는 것은 전체적인 양상을 보기 어렵고 단편적이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본문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나 고용형태 공시제 자료 등은 최근의 복잡한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설명의 편의성과 자료의 한계 때문에 항목을 각각 나눈 것은 이해합니다만, 전체적인 양상을 종합해주는 항목을 더 부가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장 분절 요인’에서 ‘요인’이 ‘까닭’이라는 의미라면, 무엇보다도 기업의 노동력 사용 전략, 그리고 기술(특히 업무와 노동력을 외부화해도 쉽게 통제가 가능하게 해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더 명확히 표현하자면 ‘기술을 노동 유연화 및 외부화에 사용하는 자본의 전략’과 그를 규제하기 어렵게 시대에 뒤쳐져 있는 노동법제도 때문입니다. 인적 속성 등은 그러한 분절을 나타내는 지점일 뿐입니다. 차라리 자본의 전략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이를 극복할 제도적 과제를 얘기하는 것에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2. 대전환 시기 주변부 노동시장의 부문별 특성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시장 특성,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특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특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추정 규모와 그 안에서의 구분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정태적이라는 느낌이라서 사례를 들어서라도 역동적인 과정이 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접고용에서는 중층성이 심화되는 과정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물류 부문에서는 각 연쇄 과정에서 모두 원청 - 자회사/위탁도급회사 (- 인력공급업체) - 특수고용/일용 인력 등으로 3-4단계로 중증화되어 있습니다. 사내하청도 1차, 2차, 심지어 3차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자회사 부분도 자회사에서 손자회사, 증손자회사까지 지속적으로 분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도 처음에는 주로 외근 직종이나 건당 성과가 명확한 직종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그렇지 않은 직종(ex., 방송사 프리랜서)에도 퍼지고 있는 확산 과정을 여러가지로 지적할 만합니다.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특성에서는 노동시간과 노동공간의 애매화를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만이 아닙니다. 재택근무, 외부근무 등은 비임금노동(특수고용)을 확산시키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비임금노동이 아니어도 휴대폰 앱이나 메시지를 통해 호출 일용직을 사용하는 대규모 작업장들이 있습니다. 즉 기술발전이 일자리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의 채용, 고용형태, 노동과정을 변화시켜서 유연성(불안정성)을 강화하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노동에서도 이주노동 정책에 의해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상태와 권리 양식이 인위적으로 분할됩니다. 중국동포노동자와 비동포노동자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E-7과 E-9 비자의 차이, 이른바 합법노동자/미등록노동자 등등의 분할선이 있습니다. 이런 분할에 대해서 좀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노사관계와 조직노동의 대응

초기업교섭 뿐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1대1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업주와 고용사업주, 도급 발주자, 다사용자 등. 이런 다양한 사용자 관계에서 어떻게 교섭을 하고 제도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인가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과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분할과 대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비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국민 사회보험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사회보험 가입이 확대되어도 여전히 고용형태, 임금노동자나 비임금노동자나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개별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안을 갖고 정부 교섭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토론3. <민주노총 조직진단과 시사점> 토론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1. 조직진단 설문조사사업

길지 않은 시간 동안 80여개 설문문항에 대해 1,300여명의 간부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노조·연맹을 포괄하여 진행했으며 산별(연맹별), 활동경력에 따른 진단과 해결방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것은 이후 사업에서 참고할만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가맹과 지역본부 임원의 인터뷰 또한 주요 간부들의 노동운동 진단과 고민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자료를 축적했다. 가맹과 지역본부 임원인터뷰의 경우 대체로 해당 산별과 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심층인터뷰라는 점에서 진단과 해법에서 개인적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한 추가해서 진행한다면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을 통해 확인된 조직진단과 해법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면서 그동안 조직적으로 논의되었거나 정책대회준비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을 덧붙여 토론문을 제출한다.

2. 조직확대와 조직운영

노동조합활동에 우호적인 정권과 사회정치적 분위기에서 조직이 확대되고 반대의 경우 조직확대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민주노총이 조직확대를 위한 목적의식적 노력과 기획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직확대를 위한 기획은 민주노총이 전략조직화대상업종을 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한 사회정치적 이슈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기획, 집행해야 한다. 전략조직화대상업종은

현재 돌봄, 플랫폼산업, 공단중소노동자, 물류센터, 이주노동자등이다.

조직확대사업을 위해서 미조직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처우개선을 산별노조의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초기업교섭확대사업과 결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확대사업에서 지역본부를 포괄하는 전 조직적 역량을 발동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략적 집중을 통해 산별노조간 경쟁을 지양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유를 위해 산별, 지역간부들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여전히 공문이 가장 중요한 소통과 지침전달의 주요한 방식이며 공문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목표, 방안등 현장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의원대회가 일상적으로는 형식화되고 쟁점이 형성될 경우 토론과 조직적 결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논쟁과 갈등의 장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4년 총선평가가 조직적 갈등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이유도 대의원대회가 조직적 이견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특정입장 관철을 위해 대의원대회를 유희시키는 등 회의전술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조직적 합의와 조직의 책임있는 결정단위 성원에 대한 대의원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의원규모를 1천명 등 적정규모로 조정하는 것과 함께 안전설명회를 내실있게 조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책제로 인한 재정적 불안정은 일부 산별노조를 제외하고 대부분 산별노조·연맹이 공통되게 안고 있는 문제다. 조직적 논의에 기초해 가까운 시일내에 전조직적으로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

3. 산별노조운동

산별노조운동이 20여년 넘게 진행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늬만 산별’이라는 평가와 냉소가 존재하며 기성 간부들일수록 이러한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산별노조운동이 정체된 것은 기업별노조운영의 관행이 유지되고 있고 법제도가 산별노조의 활동과 교섭을 제약하는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다.

이와 함께 조직체계의 전환과 조직규모의 확대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산별교섭체계와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산별노조운동의 혁신과 전진을 위한 과제를 몇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별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현해야 하며 핵심은 단협효력확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불평등 양극화의 완화, 중소기업장 노동자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효력확장제도는 유력한 방안이며 사회적 공감대도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다. 단협효력확장의 조건과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노력과 함께 지역과 업종별로 노동시간제한과 휴식·휴가권의 보장,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권보장등의 의제를 쟁점화하고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업종별 교섭과 공동투쟁을 활성화하여 초기업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대산별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체를 포괄하는 산별교섭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노동조건과 임금수준등이 유사한 업종단위 교섭과 공동투쟁을 통해 초기업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 업종 또한 규모와 업종내 지위가 다양한 조건에서 가능하면 업종 전체를 포괄하되 일부라도 기업단위를 넘어서는 교섭을 목적의식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셋째, 산별조직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1산업·1업종 1노조로 통합해야 한다.

산별조직갈등문제는 운동노선과 조직운영기풍등 여러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안에 정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별조직갈등이 노동조합의 산별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전략조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직갈등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당분간은 조직갈등이 악화하거나 새롭게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세력화문제에 대한 조직적 합의와 통일에 기초해 조직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4.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의 조직적합의가 이루어져있다. 노동운동의 목표 자체가 노동조건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 결국 집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진보정당의 분열과 약화가 장기화되어 노동운동내에서 정치세력화에 대한 패배주의와 무기력이 확대되어 있는 점이다. 설문조사에서 확인되듯이 과거 민주노동당의 경

힘이 없는 조합원들은 진보정당 지지, 정치세력화의 정당성 자체가 확고하지 않다.

대다수 간부와 조합원의 정서는 단일진보정당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상층으로 갈수록 통합의 당위성과 현실성에 대한 동의정도는 낮다.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단결의 수준은 진보정당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진보정치세력의 단결, 구체적으로 선거시기에 진보정당의 선거연합을 실현하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단결도 중요하지만 진보정당이 노동계급기반을 확고히 하고 국민적 지지를 확장해나가야 조합원에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효능감을 줄 수 있다.

진보정당의 지지율과 국민적 영향력이 취약한 조건에서 계급적 기반과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함께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모색과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계급적 원칙을 지키는 것과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절대화하지 말고 현실에서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토론과 조직적 합의가 필요하다.

5. 사회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AI와 플랫폼산업의 확대등 사회변화와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점에 대해 다수 간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들 문제에 대해 민주노총의 대응은 각 영역의 확산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방어적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각 담론이 세계사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일국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방향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기술만능주의, 신비주의를 경계하고 보편적 노동권확대를 기본으로 대해야 한다.

몇 년전 자율주행이 가까운 시일내에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기했지만 현재 자율주행은 윤리적문제만이 아니라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 현재 AI에 대한 담론 또한 일자리위기를 당연시하고 있는데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도입과정에서 노동권의 보장, 확대를 기본으로 제기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산업의 확대가 노동시장과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인 듯이 얘기하지만 본질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용자책임의 회피, 착취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는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체제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럽을 선두로 해서 기후위기가 전인류적 중심과제로 제기됐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위기와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약화되자 기후위기담론은 현저하게 후퇴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이윤추구가 지속되는 한 기후위기도, 신기술의 확산과 적용도 인류와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체제에 대한 대중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확산해야 한다.

셋째, 변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한국사회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경제기술적 변화와 한국사회의 변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이며 자본주의의 기술고도화와 함께 한계에 봉착한 자본주의체제의 변화와 맞물려있다. 무엇보다 미국주도의 일극패권이 무너지고 다극화, 자주화의 과정에 있으며 한국사회를 규정해온 종속적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자주적 발전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세계체제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온 종속성과 불균형발전을 타파하고 민중의 요구에 맞는 발전전략 모색으로 나아가야 한다.